

청렴교육

- 부정(인사)청탁 금지법,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 공인신고, 교육공무원 행동강령, 학습부교재 리베이트 근절

1 '금품등 수수 금지' 바로 알기

☐ 금품¹⁾등 수수 금지 알고 있나요?

○ 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 내용

-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금지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 위반자 제재 내용

제재대상	제재의 종류
1회 1백만원(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 신고 처리 절차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권익위·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신고가능)
- 제공자에게 반환·거부의사 표시(반환 곤란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 예외사유 >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안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 *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단, 한시적으로 명절에는 농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은 20만원으로 상향하기도 함), 경조사비 5만원(단, 화환 조화는 10만원)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체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의 다른 법률·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1)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에서 “금품 등”이란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통신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선물 이럴 땐 가능 & 이럴 땐 불가능

○ 5만원 이하 선물(한시적 설 명절 농산물·농수산물·공품은 20만원)이 가능해요!

- ① 목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
- ② 누가 누구에게: 하급공직자가 상급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③ 이럴 땐 안되요! 인사·평가 기간 중 평가자인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지

○ 5만원 초과 선물도 할 수 있어요.!

- ① 누가 누구에게: 공공기관이 → 소속공직자에게
- ② 얼마?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

- ① 누가 누구에게: 일반인이 →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인 지인 혹은 동창에게
- ② 얼마? 100만원까지 가능

- ① 누가 누구에게: 공직자인 직장 동료 → 직장 동료(상급자 포함)에게
- ② 얼마? 100만원까지 가능
- ③ 이럴 땐 안되요!

같은 부서 부서장, 인사·감사 업무수행 동료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가액범위 내 선물 가능하나, 인사·감사 기간 중에는 금지

○ 이럴 땐 선물을 할 수 없어요! 📖 기억하세요 “직무관련성”

- ① 누가 누구에게: 민원인이 → 인허가 담당 공직자에게
- ②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금지)

- ① 누구에게 무엇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 ②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금지)

* 유가증권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전예방활동 강화

가. 투명하고 적법한 예산 운용

- 학교발전기금 및 수익자 부담 경비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적법한 절차 준수
- 집행내역은 반드시 공개(학부모, 교원 등)

나. 교직원 연수 및 학부모 홍보 강화

- 촌지수수 관련하여 학기 초, 스승의 날 전, 명절 전에 교직원 연수 및 가정 통신문 발송, 또는 전 학부모 대상 모바일 문자서비스 전송
 - 문자서비스 예시문 : 맑고 투명한 전북교육행정 구현과 신뢰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부모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학부모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설명회 개최시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관련 연수실시
-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내용 및 신고센터 운영 안내 홈페이지 탑재
-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2. 처분기준 강화

- 가. 교육공무원이 촌지·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별표2]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처분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100만원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 나. 교육공무원이 불법찬조금 모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문책

다. 촌지 및 불법찬조금 관련한 자체연수 및 홍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처분대상

3.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처리방법 안내

가.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즉시 반환

나.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속기관장(학교장) 또는 행동강령관(교감 또는 원감, 교감이 없는 경우 학교장이 교사 중에서 지정)에게 신고 후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다. 신고된 금품에 대한 행동강령책임관의 처리

-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 ⇒ 폐기처분
- 멸실·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금품 등 ⇒ 사회복지시설 및 공익단체 등에 기증
-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 ⇒ 기관(학교)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학교회계에 귀속

4.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 홈페이지(www.jbe.go.kr)/정보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 촌지수수 신고(☎ 063-239-3297 교원인사과)
- 불법찬조금 신고(☎ 063-239-3576 예산과)

3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 하고 있다.

※ 공익신고자 보호는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채용비리 신고를 모두 포함

◎ 주요내용

1.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3.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4. 보호조치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 포함)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부과

-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여부 및 신고자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발생 여부를 2년 간 주기적으로 점검

5. 특별보호조치

-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6. 불이익조치 금지

- 신청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 포함)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

6. 책임감면

-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가 가능.

7. 그 외 신고자 보호제도

-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 :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와 관련,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불이익조치로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교권보호)

전라북도 내 교권 침해 사례 증가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 지속되어, 이에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을 통한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생활지도 문제를 해소하여 교육주체 상호간에 존중·신뢰하는 기반을 구축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교권침해의 유형

구분	교 권 침 해 유 형
학생	▪ 교원에 대한 폭언 ▪ 지시 불이행, 지도 불응
	▪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 수업 진행 방해
	▪ 교원에 대한 폭행
	▪ 교원에 대한 성희롱
	▪ 재물 손괴 ▪ 사이버 매체 폭력
학부모	▪ 교원에 대한 폭언
	▪ 교원에 대한 폭행
	▪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 고소·고발
	▪ 안전사고(민원 제기, 신분 위협, 무리한 피해 보상 요구)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 가정교육의 중요성 인식하기

가정교육은 학교 교육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정교육이 튼튼하지 못하면 학교 교육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성교육이나 생활 습관 개선, 관계성 교육 등은 가정교육을 통해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교원과 학부모의 관계 재정립하기

교원과 학부모 간의 신뢰와 존중은 학생 보호와 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과 학교를 신뢰할수록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 교원과 학부모는 자녀(학생)를 키우는 새로운 부부와 같습니다. 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협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 학교 교육의 미래는 교원과 학부모의 역할의 연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가 해야 하는 예절교육은 가정에서 하고, 교원은 집단행동 속에서 아이들이 최소한의 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한다면, 서로 의견일치를 보이는 것입니다.
-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모두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녀(학생)를 보호하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활동침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려요

(보호자용)



✓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어요.

불법정보유통

담임교사가
- 수감수감

할 것말고?
안되!했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불법정보유통행위,
그 밖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제2조

공무집행방해

영훈이 어머님,
수업시간인데...

아! #부%#^##\$#@ 드르죽

업무방해

우리 아이가 실수한 거예요.
당장 점수를 올려 주세요요.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빈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도 모두 안돼요.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가

교사에게
정신적인 상해를 입혔을 때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직접적인 폭행
(폭행시도도 포함)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SNS 단톡방

우리 담임아...
세상에!! #부%#
그랬대요!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 등 모든 공격적 행위

학교 방문 절차

전화나 서면으로
먼저 상담해요!

감정을 가라앉혀요.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요!

민원 제기 전에

사전에 방문목적을 밝히고
면담 예약을 합니다.

행정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실에 가서
방문증을 받고 방문 기록을 남깁니다.

보호자와 교원의
목적은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

방문증을 패용하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